

8.25 「가계부채 관리방안」 후속조치 및 보완 계획

2016. 11. 24

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

목 차

I. 8.25 대책 이후 가계부채 동향	1
II. 「8.25 가계부채 관리방안」 후속조치	4
가. 집단대출에 대한 여신심사가이드라인 적용	4
나. 상호금융 등 맞춤형 여신심사가이드라인 도입	5
다. 총체적 상환능력심사(DSR) 도입	6
라. 가계부채 특별점검 연장 실시	7
III. 금리상승에 대응한 보완방안	8
가. 금리인상의 파급영향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	8
나. 한계·취약차주의 연체부담 완화방안 검토	9
다. 서민금융 역할 강화	9
라. 제2금융권 건전성 관리 강화	11
IV. 향후 추진일정	12

I. 8.25 대책 이후 가계부채 동향

- ◇ 예년에 비해 빠른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8.25 대책의 효과, 금리상승 등으로 증가세 완화 조짐
- ➔ 8.25 대책의 후속조치를 조속히 마무리하는 한편, 금리 상승에 대비하여 서민·취약계층 관리 강화 추진

■ (은행) 8.25대책 후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는 추세

① 여신심사가이드라인('16.2월) 등으로 전년 대비 증가세가 주춤하는 상황에서 9월부터 감소폭 더욱 확대

* 8.25대책 시행직전(6~8월) + 21.4조원 → 전년(+23.1조원) 대비 $\Delta 7.4\%$
8.25대책 시행이후(9~10월) + 13.5조원 → 전년(+15.1조원) 대비 $\Delta 10.5\%$

- 특히, 최근 급증한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(주금공 양도분)를 제외하는 경우 전년대비 감소폭은 더욱 확대

* 9~10월 주금공 양도분 제외시 +10.3조원 → 전년(14.0조원) 대비 $\Delta 26.4\%$

② 보증비율 축소 등으로 신규 중도금 승인도 큰 폭 감소

* 중도금 신규승인(월평균, 조원) : ('13)28 ('14)4.5 ('15)5.7 ('16.1~9)4.5 (16.10)1.6

③ 11.3 부동산 대책, 금리 상승 등으로 11월에도 전년대비 증가폭의 감소세 지속

* 일평균 증가규모(억원) : ('15.11)3,587 → ('16.11.1~18)3,174 (전년대비 $\Delta 11\%$)

⇒ 다만, 예년 대비 빠른 증가세가 유지되는 점을 감안, 지속적으로 안정적 추이를 유지하도록 적극 관리

※ 10월 증가규모(+7.6조원)는 '10~'14년(평균 +4.0조원)에 비해 여전히 높은 상황

<은행 가계대출 증감(금감원 속보치)>

(단위: 조원)	'14년			'15년			'16년 (~10월)		
		9월	10월		9월	10월		9월	10월
가계대출	+38.6	+3.7	+7.1	+78.2	+6.2	+8.9	+56.7	+6.0	+7.6
집단대출	+0.9	△0.3	+0.1	+8.7	+2.3	+1.4	+17.9	+1.7	+1.7
주금공양도	△0.1	△0.6	+0.8	+33.9	+0.8	+0.3	+10.9	+1.2	+2.1

■ (비은행) 9~10월에도 빠른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으나 8.25 대책이 본격 시행*된 11월 들어 증가세 둔화 조짐

* 상호금융권 비주택담보대출의 LTV 인정비율 강화, 특별점검 실시 등

① 비은행권 가계부채 증가는 상호금융과 새마을금고가 전인

- 9~10월에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전년을 크게 상회

* 9~10월 증감('15~'16, 조원) : (상호금융)+3.0 → +4.5 (새마을금고)+1.1 → +2.8

<비은행 가계대출 증감(행자부, 금감원 속보치)>

(단위 : 조원)	'14년			'15년			'16년		
		9월	10월		9월	10월		9월	10월
비은행 계	+25.1	+1.9	+2.2	+29.2	+2.7	+3.8	+39.0	+4.1	+5.7
상호금융	+12.4	+1.0	+0.7	+12.3	+1.5	+1.5	+17.6	+2.1	+2.4
새마을금고	+5.6	+0.3	+0.3	+4.2	+0.5	+0.6	+9.3	+1.1	+1.7
보험사	+5.0	+0.5	+0.7	+8.1	+0.4	+1.0	+6.4	+0.8	+1.2
여전사 ¹⁾	+1.0	+0.0	+0.2	+1.1	+0.2	+0.2	+2.1	+0.1	+0.4
저축은행 ²⁾	+1.1	+0.1	+0.3	+3.5	+0.1	+0.5	+3.6	+0.0	-

1) 여전사는 주요 7개사 가계대출 기준

2) 저축은행은 9월말까지 집계

② 다만, 비주담대 LTV 인정비율 축소가 시행된 11월들어 상호금융권 일평균 가계대출 증가액이 전월대비 큰 폭 감소

* 상호금융 일평균 가계대출 증가액(억원) : (10월)+1,204 → (11.1~11)+552

■ (가계대출 금리) 고정금리형* 중심으로 9월부터 대출금리 상승

* 장기 금융채(5년물) 금리 변동은 주로 고정금리형 대출금리에, 단기·수신금리(CD, 코픽스, 코리보 등) 변동은 주로 변동금리형 대출에 영향

① 9월부터 은행권 가계대출 평균금리가 상승세 시현

* (8월)2.95% → (10월)⁹⁾3.1%내외 (15bp 내외 상승)

② 특히 주담대 금리는 고정금리를 중심으로 다소 가파르게 상승 (4개 주요은행이 제시한 금리 기준)

* 고정금리 : (9월말)2.74%~4.70% → (11.22일)3.3%~4.8% (평균 58bp ↑)
변동금리 : (9월말)2.57%~4.35% → (11.22일)2.8%~4.5% (평균 20bp ↑)

③ 이는 주로 시장금리 상승에 기인하나, 리스크관리 강화에 따른 가산금리 상승도 일부 작용

* 고정금리 상승분 : +58bp = 대출기준금리 상승(+54bp) + 가산금리(+4bp)
변동금리 상승분 : +20bp = 대출기준금리 상승(+10bp) + 가산금리(+10bp)

① (집단대출) 리스크 관리 대폭 강화

① 집단대출 취급시 차주의 소득자료 확보

(자율로 10월 先 시행 → 세칙 개정중, 11.29일까지 개정변경 예고)

② 집단대출 심사시 사업장 현장조사를 의무화하고 사업성 평가 강화* 및 시공사·지역 등 편중리스크 관리 강화

(자율로 10월 先 시행 → 세칙 개정중, 11.29일까지 개정변경 예고)

* 분양율, 시공사 시공능력·신용등급, 주변지역대비 분양가 등 구체적인 평가요인을 기반으로 사업성 평가

③ 주택금융공사,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공하는 중도금 보증 비율(100%→90%), 건수(각 2건→통합 2건) 축소(10.1일)

➔ 중도금 신규승인 : ('16.9월) 5.2조원 → (10월) 1.6조원

② (상호금융) 비주택담보대출의 LTV 산정기준 강화(10.31)

* 비주택담 LTV 총한도 80% → 70%

기본비율 최저한도 50% → 40% 가산비율 한도 10% → 5% 등

➔ 비주택담 일평균 증가액 : (10월)+631억원 → (11.1~11)+139억원

* 연간 비주택담보대출 증가액(전년 9조원) 22%(약 2조원) 감축 추정

③ (전세금) 전세금 분할상환 상품 출시를 위한 은행권 협의중

④ (감독 강화) 모니터링 및 점검 강화

① 금융위·금감원 특별 TF를 구성(9월)하여 업권별 가계부채 증가현황 및 리스크요인 밀착 모니터링 중

②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급증한 은행, 상호금융조합, 새마을금고 등을 대상으로 특별점검('16.10월~) 중

Ⅱ. 「8.25 가계부채 관리방안」 후속조치

가 집단대출에 대한 여신심사가이드라인 적용

① ('17.1.1일 이후 분양공고 되는 사업장) 「잔금대출」에 대해 현행 주택담보대출의 여신심사가이드라인 적용

⇒ 상환능력내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여신관행 확산

※ 은행권의 경우 '19년 이후 매년 1.0조원 규모의 가계부채 증가속도 감축효과, 매년 15.6만가구의 가계부채 질적 개선효과 기대

<집단대출에 대한 여신심사가이드라인 기본방향(안)>

※ 기본방향을 바탕으로 업권 스스로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 예정

√ (범위)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에 대해서만 적용

* 중도금대출은 ①보증부대출이고, ②대출성격상 상환만기가 짧아 분할상환 등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

√ (적용기관) 은행·보험뿐 아니라 상호금융 및 새마을금고까지 적용

* 이미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이 도입된 은행·보험업권에 적용하고, 상호금융권, 새마을금고는 업권내 자율적 협의를 거쳐 도입방안 확정

√ (대상) '17.1.1일 이후 분양공고가 이루어지는 사업장

√ (내용) 현행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가이드라인과 동일 적용 원칙

* ①소득증빙자료 객관성 확보 ②비거치·분할상환 ③금리상승 가능성을 감안한 상환능력평가(stress DTI), ④DSR 지표 활용

② ('17.1.1일 前 분양공고 사업장) 고정·분할상환을 유도하는 입주자전용 보증자리론 한시('17~'18년간) 운영

○ '17.1.1일 前 분양공고 사업장의 잔금대출인 경우 高 DTI(60%~80%) 차주에게도 한시적으로 보증자리론 공급

※ 여타 요건은 보증자리론과 동일하게 운영, '17.1월중 출시

⇒ 상대적으로 저금리인만큼, 수분양자들의 자발적 참여 활성화 기대(동 상품 가입시 사실상 여신심사가이드라인 적용 효과)

* 현재 주택담 평균금리(약3.5%)대비 금리가 낮고(약 100bp ↓), 향후 시장금리 상황을 감안할때 그 차이가 커질 가능성

나 상호금융, 새마을금고에 맞춤형 여신심사가이드라인 도입

□ 상호금융, 새마을금고 자체적으로 차주특성 등에 적합한 맞춤형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마련·시행 예정(17.1/4)

① (소득증빙 정교화) 농·어민에 맞는 소득증빙 방식 마련

② (부분 분할상환) 매년 원금의 1/30*을 상환

*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최장만기가 30년인 점을 감안

※ 매년 신규 주담대의 42.3%가 분할상환이 적용되고, 매년 0.3조원의 가계 부채 증가속도 감축효과 기대

<상호금융 맞춤형 여신심사가이드라인 기본 방향(안)>

√ (범위)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, 고부담대출*, 신고소득 제출시 등

* 우선 LTV>60% 적용하고 소득증빙기반이 마련되면 DTI>60% 요건도 적용

√ (소득증빙) 농·어업인 등 차주특성을 반영하여 소득추정 정교화

* 「농축수산물소득자료」(농진청), 「어가경제 통계자료」(통계청) 등을 활용하거나, 보험권과 유사한 “소득예측모형” 활용 인정

√ (분할상환) 만기가 짧고(3~5년) 소득이 일정치 않은 차주 특성 등을 감안하여 만기에 상관없이 매년 전체 원금의 1/30 이상 분할상환 방식 적용

√ (예외사항) 주택자금 이용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예외사항 충분히 마련

- 예외사항(예) : 3천만원 이하 대출, 만기 3년미만 대출(만기연장을 통한 적용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만기연장횟수 제한을 병행 검토)

< 상호금융 맞춤형 여신심사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>

	은행권	상호금융권
① 소득증빙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증빙서류 有(증빙소득) 건보료 등으로 추정(인정소득) 재산 등으로 추정(신고소득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은행권 인정 기준 + <u>농어가 통계자료 등 활용, 소득예측모형 활용한 소득</u>
② 비거처·분할상환	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주택구입용 자금 고부담대출(LTV or DTI>60%) 신고소득 활용시
	산정 방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분할상환 <u>매년 원금의 1/30 분할상환</u>

다 총체적 상환능력심사(DSR) 도입

□ DSR을 연내 도입하고, 대출심사·사후관리 등에 활용
(12.9 신정원 전산시스템 구축완료, 연내 금융권 DSR 산출)

○ 우선 참고지표로 활용하되, 가계부채 증가추이, 금융권 활용도 등을 보아가며 필요시 자율규제 전환 검토(예시 참고)

< 예시 : 총체적 상환능력심사 활용 >

① 금융회사 여신전전성 관리를 위해 활용

- 전체 가계대출에서 DSR 수준이 높은 대출이 차지하는 비율을 일정수준 이하로 관리

② 차주에 제공하여 상환계획 작성·상담시 활용

* 금융회사는 DSR이 높거나 상환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될 경우 만기 조정·대출규모 축소 등을 권유

< 차주에 제공되는 정보(예) >

	기존대출 원리금상환액		신규대출 원리금 상환액	전체 상환액 (A)	예상소득 (B)	DSR (A/B)
	○은행	△조합				
1년차	(거치)	1,000만원	1,500만원	2,500만원	5,000만원	50.0%
2년차	(거치)	1,000만원	1,500만원	2,500만원	5,000만원	50.0%
3년차	2,000만원	1,000만원	1,500만원	4,500만원	5,000만원	90.0%
...
○년차	2,000만원	6,000만원	1,500만원	9,500만원	6,000만원	158.3%
○년차	2,000만원	-	1,500만원	3,500만원	6,000만원	58.3%
만기	5,000만원	-	1,500만원	6,500만원	6,000만원	108.3%

DSR이 과도한 시기 → 만기조정·대출축소 등 권유

③ 대출 사후관리(론 리뷰), 채무조정 등에 활용

- DSR이 과도히 높게 나타나는 차주에 대해 소득수준을 재확인하거나, 채무조정을 권유하고 채무상환계획을 상담시 활용

라 | 가계부채 특별점검 연장 실시

- 금융위·금감원 가계부채 T/F를 통해 은행권·비은행권 가계대출 상황을 지속적으로 밀착 모니터링

➔ 금년 하반기(10월)부터 시작한 가계부채 특별점검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

(1) 은행권

- 은행별 자체적으로 수립한 가계대출 계획과 실적을 비교하여 리스크 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는지 여부 점검
 - 매일 은행별·대출유형별(개별 주담대·집단대출·기타대출 등)로 가계대출 증가추이를 면밀히 점검
 - 가계대출 증가세가 빠르고 리스크관리가 취약할 것으로 우려되는 은행에 대해 상시감시를 강화하고, 필요시 현장점검
- '2017년 가계대출 관리계획' 마련시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두고 수립하도록 지도

(2) 제2금융권

- 가계대출이 급증한 상호금융 조합 및 새마을금고에 대한 특별검사 실시(금감원, 각 업권별 중앙회 합동)
 -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리스크관리 실태 등을 집중점검
 - * 주요 점검사항(예시) : LTV 기본비율·가산비율 적용 적정성
대출심사 및 감정평가간 업무분리, 외부감정평가법인 선정 공정성
집단대출 사업성평가 적정성, 심사절차 준수여부 등
 - 리스크관리 미흡사항, 절차 미준수, 위규사항 등이 발견될 경우,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엄중 조치
- ※ 11.22일 현재 총 58개 조합(상호금융 26개, 새마을금고 32개)에 대해 점검을 완료하였고, 32개 조합을 점검 중(상호금융 30개 새마을금고 2개)
→ 연말까지 18개 조합을 추가 점검하고 내년에도 지속 점검계획

Ⅲ. 금리 상승에 대응한 보완방안

가 | 금리인상의 파급영향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

- 미 금리인상과 더불어 新행정부 취임에 따른 시장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점을 감안, 보다 엄격한 가정하에 금융기관 건전성, 차주 상환능력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를 주기적으로 실시
 - (대상 금융기관) 은행뿐만 아니라 상호금융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고 있는 전 업권을 대상으로 실시
 - (대상 차주) 취약성 정도에 따라 가계를 세분류하여 영향을 분석 → 맞춤형 대책 마련의 근거로 활용
 - * 예 : DSR 비율, 자산/부채비율, 소득분포 등을 근거로 부실·부실우려·잠재부실·안정 그룹으로 분류하고 시나리오별 영향 분석
 - (시행주기) '16년 말까지 1차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하고, 상황변경을 반영하여 수시로 실시
- 스트레스테스트 결과를 반영하여 “상황별 대응계획(contingency plan)”을 재정비

< 상황별 대응계획 주요 내용(예시) >

- ① 가계대출 부실 확대시 금융회사 건전성 악화 등에 대비하여 자본확충 등 단계별 건전성 강화조치 시행
- ② 채무불이행자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경우 채무조정, 재기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 확대
- ③ MBS 등 채권시장 안정 등을 위한 단계적 조치 시행 등

나 | 한계·취약 차주의 연체부담 완화방안 검토

- 은행권과 TF구성을 통해 서민·취약계층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 검토 추진(내년초까지 TF 운영)

< 검토사항(예시) >

① 소비자권익 제고 차원에서 담보권 실행 관행 개선

※ 담보권 실행시기 등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합당한 수준의 은행별 모범사례가 전 은행권에 확산될 수 있도록 유도

* 예 : ①연체이후 일정기간 경과후 담보권을 실행하되 그 전에 안내하고 채무자가 일정기간 담보권실행 유예를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

②주담대를 받은 채무자가 실직 휴업 등으로 소득 감소시 일정기간 원금 또는 이자상환을 유예하는 제도 확대 등

② 프리워크 아웃 활성화 방안

※ 연체기간에 따라 채무조정제도에 대한 설명, 상담, 안내 강화 등

다 | 서민금융 역할 강화

① 정책서민자금의 차질없는 공급을 통해 금융애로 해소

- 금리상승시 취약계층의 정책서민자금 수요 확대에 대비하여 추가재원 발굴 등을 통해 정책서민자금의 공급여력 확대 추진

※ 은행권 휴면예금 신규 출연 등을 통해 공급여력을 금년수준(5.7조원)보다 확대

- 현행 제도의 지속적인 개선*과 함께 서민금융상품 통합, 공급채널 확대 등 전면적인 개편방안 마련

* 햇살론 생계자금 대출한도 확대(1,000→1,500만원), 햇살론 신청서류 간소화 등

- 원스톱·맞춤형 서민금융 공급 확대를 위해 서민금융통합지원 센터의 상담인력을 확충하고 지역매체 등을 통해 홍보 강화(17.1)

② 중·저신용층의 금리부담 경감을 위해 사잇돌 대출, 서민 금융회사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중금리 대출 시장 활성화

- 은행·저축은행 사잇돌 대출*(총 1조원 규모)을 차질없이 공급하고, 지원상황 등을 보아가며 추가 보증지원 필요성 검토**

* 11.22일(화) 기준 실적 : 총 2,727억원(은행 2,051억원, 저축은행 676억원)

** 은행권 공급목표 5천억원은 '17년 상반기 중 소진 예상 → 총 공급규모 확대 방안에 대해 서울보증보험 및 참여 은행 등과 협의해 나갈 예정

- 저축은행 이용시 신용등급의 과도한 하락 등 신용평가 인프라 개선도 지속

* 대부업 정보공유 확대, 은행·저축은행 연계대출 신용등급 하락폭 축소 등 기 추진

③ 한계차주의 채무 연체시 자활·재기 기회 확대

- 급격한 신용등급 하락시 상환능력별 맞춤형 채무조정, 성실 상환자 인센티브 확대* 등을 적극 활용하여 조속한 재기 지원

* 약정금액 75% 이상을 성실 변제하였으나, 불가피한 사유(사고로 인한 노동력 상실 등)로 상환이 어려워지는 경우에는 잔여채무 면제

- 법원행정처 등과 적극적 협력을 통해 Fast-Track*을 조기 확산

* 서민 취약계층에 대한 공적 채무조정 절차가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

- 연체채무자가 과도한 채권추심 등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대부업체 등 「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*」 이행 유도

* ①소멸시효 완성 채권의 추심및 매각 금지 ②채권별로 1일 2회를 초과하여 이메일, 문자메시지, 방문 등 채무자 접촉 금지 등

- '16.11.7일부터 신규로 가이드라인을 적용받는 대부업권에 대해 금감원이 이행실태를 중점적으로 검사·감독

* 지자체 협조요청을 통해 지자체 등록 대부업체의 가이드라인 준수 유도

라 제2금융권 건전성 관리 강화

□ 취약차주가 상대적으로 많은 제2금융권의 건전성 관리 강화를 위한 방안을 선제적 추진

❶ (상호금융) 수신 증가가 가계대출 급증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일률적인 예대출 규제완화방안*을 합리적으로 재조정

* '16.7월 기준 입법예고(안) : 쏘조합 (현행)80% → (~'18년말)90% → ('19년~)100%

-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및 질적 구조개선을 위해 분할상환 실적이 우수한 조합*에 한해 예대출 규제 완화를 적용

* 총 대출 취급액 대비 분할상환 대출 비율이 일정 수준(예 : 30%) 초과

❷ (여전) 카드대출 등 증가세*가 지속됨에 따라 고금리로 인한 소비자 부담 증가 및 여전사 경영건전성 악화 우려

* 카드사 대출(조원) : ('13말) 27.8 → ('14말) 29.3 → ('15말) 31.7 → ('16.9) 33.7

- 금감원을 통해 카드대출 현황, 증가원인 및 리스크관리 적정성 등에 대해 점검('17.1분기중) · 관리

❸ (저축은행) 자산건전성 분류기준, 충당금 적립 기준 등 건전성 규제를 은행 · 상호금융 수준으로 단계적 강화

* 예 : (현행) 정상 연체 2개월미만 / 요주의 2~4개월 / 고정 4개월 이상
→ (개선) 정상 연체 1개월미만 / 요주의 1~3개월 / 고정등 3개월 이상

* 예 : 가계대출 대손충당금 적립금 :
(현행) 정상 0.5% 요주의 2% → (개선) 정상 1% 요주의 10% 등

IV. 향후 추진일정

추진과제	필요조치	추진일정	소관
[1] 「8.25 가계부채 관리방안」 후속조치			
① 집단대출에 대한 여신심사가이드라인 적용	업권별 여신심사가이드라인 제 · 개정	12월중	업권별 협회
② 입주자전용 보증자리론	잔금대출에 대한 주금공 신상품 출시	'17.1월중	주택금융공사
③ 상호금융 맞춤형 여신심사가이드라인	상호금융 맞춤형 여신심사가이드라인 제정/시행	12월중/17.1/4분기	농협, 신협, 수협, 새마을금고 산립조합 중앙회
④ 총체적 상환능력심사(DSR) 도입	신용정보원 전산구축 금융권 자율 활용	12월초 연내	신용정보원 업권별 협회
⑤ 가계부채 특별점검 연장 실시	가계대출 증가속도가 빠른 금융회사 특별점검	'17.上까지 지속실시	금융위, 금감원
[2] 금리상승에 대응한 보완방안			
① 스트레스테스트 실시	금리인상에 대비한 시나리오별 스트레스테스트 컨틴전시 플랜 재정비	'16말 '16말	금융위, 한은 금감원 등 금융위
② 한계 · 취약차주의 연체부담 완화방안 검토	한계차주 지원방안 마련	연내	금융위/금감원
③ 서민금융 역할 강화	정책서민자금 차질없는 공급 중금리대출 활성화 한계차주 자활 · 재기 활성화	지속 지속 지속	금융위/금감원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
④ 제2금융권 관리 강화	상호금융 예대출 규제완화 여전 · 카드사 점검 저축은행 건전성규제 정비	'17.上 '17.1분기 '17.1분기	금융위/관계부처 금융위/금감원 금융위/금감원